

'연구소 정치' 시동 ... 안철수가 움직인다

미국 진보적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벤치마킹

정책·인적 네트워크 마련 ... 정치세력화 수순인 듯

국회에 입성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자신의 정치활동의 토대가 될 연구소 출범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정당 기반이 없는 안 의원은 연구소를 기반으로 정책적, 인적 네트워크를 마련하면서 정치세력화 수순을 밟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신당 창당의 정치작업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안 의원 측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안 의원 측은 안 의원의 의정활동은 물론 정치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소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결론 짓고 설립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 인근인 마포구의 가든호텔 맞은편 건물을 예비장소로 물색해놓고 이사장과 소장 등 연구소를 이끌 핵심인사 인선을 진행 중이다.

연구소 출범 준비는 대선캠프에서 국민정책본부 본부장과 간사를 지낸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홍중호 서울대 교수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 이사장으로는 두 사람을 비롯해 한완상 전 부총리, 최장집 고려대 교수, 최상봉 고려대 명예교수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안 의

원은 조만간 이들과 접촉, 이사장을 맡거나 이사장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 교수나 홍 교수는 연구소 소장 후보로도 고려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실무연구진은 대학교수나 각계 전문가 위주로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구소에는 실무진 7~10명 가량이 상주하되 대선캠프의 정책포럼에 참여했던 교수 등과도 협업하는 유연한 형태의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소 명칭은 안 의원의 트레이드마크인 '새정치'라는 말을 넣는 방안과, 지역에 있는 의원 사무소를 '정책카페'라고 명명한 것처럼 국민들이 부담없이 다가올 수 있도록 소프트하게 명명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연구소는 미국의 진보적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야별 정책을 양산함으로써 안 의원의 의정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안 의원 측은 연구소 이사장과 소장을 이르면 내달 초 인선하고, 내달 중에는 연구소를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연구소 출범이 신당 창당 등 세력화를 위한 '징검다리'로 주목을 받는

것은 유력 정치인들의 전례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미래연구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태재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방자치연구소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재단과 연구소를 통해 정책 연구와 함께 인적 기반을 다졌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 첫 입성해 본회의에 참석, 국회의원 선서를 마친 뒤 연단에서 간단한 인사말을 했다.

안 의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노년 병 보결선거 당선으로 19대 국회 늦깎이로 등원한 안철수입니다"라며 특유의 '모범생 스타일'로 인사를 건넸다.

안 의원은 "이번 선거를 통해 많이 배웠다. 국회의원이 얼마나 엄중한 책임을 갖게 되는지 선거과정에서 체험했다"며 "결국 선거란 유권자 정치인 간 약속을 맺는 과정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약속"을 강조했다.

이어 "유권자와 약속을 지키고 기대에 걸반이라도 부응하기 위해 이곳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도 다짐했다.

특히 무소속 의원임을 의식한 듯 "정치란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도출했다. 부족한 것 도움 청하고 늘 겸손한 자세로 함께 하겠다"며 조언을 당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문·안 인사' 문재인 민주당 의원도 안철수 의원 자리로 찾아가 인사한 후 나가고 있다. /연필뉴스

쪽지에산·능장심사...추경 5월로 넘겨 與 "추경 먼저" 野 "경제민주화 먼저"

17조3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에서 산안 국회 통과가 다음 달 중순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여야는 다음 달 3일 또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상호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일정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5월 초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고,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도 "내달 초 처리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민주화 입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며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가 재계의 반발에 동조해 경제민주화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중환 의원은 "경제여건을 감안해 순환출자금지 등 기업규제 강화 논의에서 완급을 조절할 필요 있다"며 "강도높은 세부조사는 경기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 후퇴를 강하게 비판했고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파헤치는데 주력했다.

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무리한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발언한 점을 '입법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했다.

윤우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방안을 사실상 포기했는데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

김현미 의원은 "이번 추경은 작년 말 이명박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성장률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분석회계에 따른 것"이라며 추경 편성 자체를 문제삼았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론'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민주화 입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며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가 재계의 반발에 동조해 경제민주화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중환 의원은 "경제여건을 감안해 순환출자금지 등 기업규제 강화 논의에서 완급을 조절할 필요 있다"며 "강도높은 세부조사는 경기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 후퇴를 강하게 비판했고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파헤치는데 주력했다.

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무리한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발언한 점을 '입법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했다.

윤우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방안을 사실상 포기했는데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

김현미 의원은 "이번 추경은 작년 말 이명박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성장률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분석회계에 따른 것"이라며 추경 편성 자체를 문제삼았다.

이예 앞서 지난 26일 국회의 경제·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정부도 '지방 죽이기' 나서나?

수도권 공장 신·증설 추진 이어 기업활동 규제도 완화

광주·전남 등 전국 지자체 거센 반발 불보듯

박근혜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내 공장 신·증설과 대학이전 등을 허용하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추진(광주일보 26일자 1면)에 이어 민간기업의 투자유도를 명분으로 수도권에서의 기업활동 규제도 완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전남 등 전국 지자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8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14개 경제부처와 경제

5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중이며, 조만간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규제개선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며칠 내에 발표하겠다"면서 "돈이 있어도 투자를 못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며, 이번 기회에 털고 갈 것

(규제)은 다 털어보자는 취지로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도권 규제의 완화를 논의하기로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확 풀어 투자가 많이 돼야 일자리가 생긴다. 짚끔짚끔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규제 완화를 약속한 것을 확대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경제 5단체 등에서 그동안 기업투자자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 수도권 규제 정책으로 '수도권전비계획법'과 '도시주변 산업의 입지를 억제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꼽아왔다는 점에서 관련 법안의 완화가 점쳐지고 있다.

특히 기업의 지방 투자 등을 유도하기 위한 '수도권전비법'은 수도권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등 3개 지역으로 나눠 중소기업이나 일부 첨단업종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장 신·증설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반발을 의식해 수도권 규제 완화 방향을 규제 철폐보다는 기업이 투자의향은 있지만, 각종 규제로 투자가 막힌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태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계의 숙원인 인건 상승도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설, 경기 동부권 대기업 공장증설, 정비발전지

구 지정 등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주요 사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에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 수차례 강행했다가 좌초된 '수도권전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답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주면 상대적으로 지방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할 것"이라며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lucky@kwangju.co.kr

빛의만정

- 김중두

괴상한 나무 한 그루만 자라났다

하나투어

www.HanaTour.com

하나투어 광주/전남 전용 상품으로 화사한 봄나들이 가세요~!

편안한 무안출발 상품!

모든나라여행사

전남대정문 062)521-2100

윤기주하나투어

신세계 이마트 1층 062)360-0166

세정투어여행사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464-8000

여로관광여행사

순천 공전예술극장 건너편 061)742-1270

남해여행사

목포 한사랑방문 061)287-4100

기기묘묘한 절경 장가계!

4월 01일 ~ 5월 17일
매주 월요일/금요일 (총 14회)

장가계 / 월가계 4일 / 5일 "별마사지" 849,000원 ~

장가계 / 월가계 4일 / 5일 "명품호텔" 1,149,000원 ~

장가계 / 월가계 4일 / 5일 "호텔엔그레이드" 949,000원 ~

거대한 자연, 맛있는 음식대만 여행

5월 16일 (목)
석가탄신일 3박 4일

대만 4일 "핀수이" 지우펀 899,000원 ~

대만 4일 "이류" 화련 "101빌딩" 1,149,000원 ~

대만 4일 "이류" 화련 "다 드림" 949,000원 ~

하나투어 단독 크루즈

스타크루즈 제미니호
여수·제주·상해 5일
코드 CCC820 ₩750,000원 ~

하나free

타이완(대만) 자유여행
5월 16일 단, 하루
타이완(대만) 4일 699,000원 ~

광주/전남 기획상품

마닐라 / 보홀 5일 1,299,000원 ~

서안/남양 정주 6일 1,450,000원 ~

등유림 5개국 9일 3,600,000원 ~

광주/전남 기획상품

특급 세키아 온천 *야나기와 벚놀이
일본-북큐슈 3박 4일 푸른해리
출발일 5월 11일(토), 18일(토), 25일(토) 349,000원 ~

국내/제주도 상품

[제주도] 제주도 3일 318,000원 ~

[제주도] 제주도 3일 319,000원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세는 상기상품 가격의 별도지불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서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선택경비 선택관광경비, 안내원봉사료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구로 광명동 1번지 (하나투어)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 제26004-1993-6(중구구) ■관광블로그 Tel 1577-1233 ■22억1천만원 보증보험 가입 ■숙소:2급호텔이상 ■교통편:항공/버스/페리 ■항공사별로 유통할증료 인상금액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